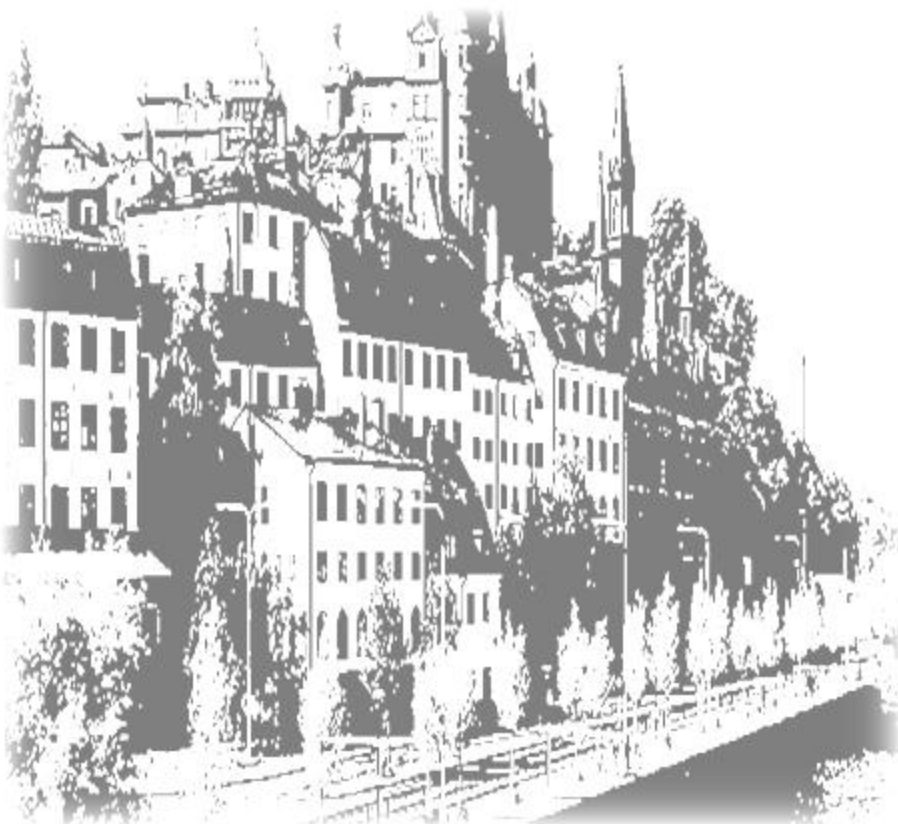


스웨덴의 실패 이야기

닐스에릭 샌드버그 지음, 공병호 역



훑어보기

1997년 말에 불어닥친 한국의 경제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발전방식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새로운 틀이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확실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번영이나 아니면 참혹한 역사의 반복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나갈 방향을 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한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자유시장원리에 철저히 적응시키는 것 뿐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원리로 해결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개혁이야말로 시대가 요청하는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파 이데올로그Ideologue들은 여전히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혁명을 주장하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중도노선middle way을 내세우는 세련됨으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이든 중도노선이든, 모두 다 실패를 기약하는 넌센스라는 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래에 우리 나라가 자유주의가 아닌 중도노선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부 좌파적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관념 속에서 숨어 있던 이데올로기가 사회정책으로 가시화될 수도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중도노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노선은 이러한 환상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 그것이 비록 민주주의라는 그럴 듯한 외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바로 그러한 실패의 전형적 사례이다. 스웨덴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시장원리를 무시한 중도노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의 지식인이 전해주는 '스웨덴 실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스웨덴과 스위스는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내는 평판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교전국들 사이에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뒤

스웨덴과 스위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스위스는 전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반면 스웨덴의 경제는 1960년대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강국면에 있다. 그 기간 동안 스웨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스웨덴의 산업화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로 약 100여 년에 걸쳐 스웨덴은 다른 어떤 산업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 왔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국제적으로 성장해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해외에서 유입된 기술과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났고, 셋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였고, 넷째,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고안된 산업문화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제성장은 곧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은 70년대에 2%로 하락하더니 80년대에는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업의 파산이 5배나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2%에서 8%로 상승했다. 정부는 GDP의 10%에 이르는 예산적자를 기록했으며 외채는 두 배로 늘어났다. 어떤 메커니즘이 스웨덴의 경제를 이런 위기로 몰아넣었을까?

1932년 이래 스웨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거의 계속 집권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핵심이 되는 세력은 사회민주당과 노조연합이며 이들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포괄적인 개입으로 특징지어진다. 사회민주주의는 스웨덴의 정치적 사고체계를 형성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특권을 만들어 냈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원을 둔다. 비록 사회민주주의가 급진적인 혁명을 포기한다고는 하지만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목표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경제를 국유화하거나 최소한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목표로 인해, 스웨덴에서는 케인즈의 개입정책이 쉽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케인즈적 개입주의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스웨덴의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한 때 계획경제체제로 진전하기도 했다. 1944년에 전후 경제불황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민주당은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1948년 선거에서 수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은 모든 기업을 사회화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계획경제나 기업의 사회화가 선거에 의해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소득

을 사회화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조세의 폭이 넓어지고 한계세(marginal tax) 및 간접세가 증가했다. 그 결과 스웨덴에서 저소득층은 소득의 60%, 고소득층은 소득의 65%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0년경부터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점점 더 집단적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개인의 예금을 집단주의화 시키는 방법으로 국영의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아동보호는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질병이나 실직과 같은 불행에 대한 대비도 개인의 저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사회보험에 의해서 해결된다.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한다. 스웨덴에서의 평등은 '불공정' 자체에 대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이'도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선호의 차이가 무시되고 일방적인 평등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기술수준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과 예금의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저축 동기가 매우 낮아졌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의 저축률은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주식투자에 의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소득에 비해서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 왔다. 즉 이윤분배에 대한 세금이 85%에서 92%에 달했던 것이다. 이렇게 배당소득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세제(稅制)는 산업구조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즉 오래된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윤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의회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거의 완벽하게 결핍되어 있다. 즉 51%의 다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민주당은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부여해 왔다. 더욱이 스웨덴 헌법은 소유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미약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소유권을 무력화시키는 세금제도를 무제한적으로 도입해 왔다.

사회민주주의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현재, 스웨덴은 인구의 20% 이상이 실업상태에 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진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둘째,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며, 셋째, 기본급여율(구제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스웨덴 경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성장의 동기가 쇠약해졌고, 경제의 유연성

을 잃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쟁과 기술이 국제화됨으로써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세금제도와 복지제도의 일반보호법안이 이러한 변화를 막는 강력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스웨덴의 실패 이야기¹⁾

닐스에릭 샌드버그²⁾(다겐스니헤터 편집인) 저
공병호(자유기업센터 소장) 역

1) 이 책은 스웨덴의 팀브로Timbro 연구소에서 발행한 것을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가 입수하여 번역 출판한 것이다. 자료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팀브로의 안데르스 린더P. J. Anders Linder 소장께 감사드린다. 팀브로 연구소는 스웨덴의 자유기업주의를 위한 정책연구소think tank이다. 이들은 자유기업,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팀브로는 또한 기업가, 정치인, 산업인, 예술가 및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도 하고 있다.

2) 저자 닐스에릭 샌드버그Nils-Eric Sandberg는 스웨덴 신문인 다겐스니헤터의 편집인으로, 재정, 조세, 주택 및 경제문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서 비평을 해왔다.

1. 스웨덴에서 잘못된 것은?

예전에 아주 비슷한 두 나라가 있었다. 두 나라 모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으며 국토가 좁고 수세기 동안 독립을 누려 왔다. 두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서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두 나라에는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평판 좋은 기업들이 있었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이 내린 축복에 있다. 둘 중 한 나라는 풍부한 광물, 산림,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나라는 단지 젖소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마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만 했고, 또한 천재성도 있어야 했다.

스웨덴과 스위스를 비교해 봄으로써, 1970년대 이후 스웨덴 경제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훌륭하게 안정을 되찾았다. 이들 두 나라는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교전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함으로써 중립을 유지했다. 폐허가 된 1945년의 유럽에서 산업시설들을 그대로 보유한 스웨덴과 스위스는 마샬의 원조The aid of Marshall plan로 원기를 되찾은 생산자 중심 시장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웨덴은 천연자원 때문에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두 나라 모두 비교적 많은 수의 크고 국제화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차이점이라면 스웨덴의 산업이 당시 유럽개혁에 필요한 자본재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스웨덴의 경제는 1945년보다 더 훌륭한 출발을 한 적이 없다.

전쟁 직후, 두 나라의 환율은, 스위스 화폐 1프랑이 스웨덴 화폐 0.9크로나만큼의 가치를 지녔었다. 그러나 1997년 현재 스위스의 1프랑은 스웨덴의 5.65크로나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1970년에 스웨덴은 OECD 국가들 중 1인당 GDP 순위에서 세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스위스는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 2위를 지키고 있으나, 스웨덴은 17위로 떨어졌다. 스위스는 거의 매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스웨덴은 196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았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25년 동안 두 나라 수출품의 단위(킬로그램)당 가격을 비교해 보았다. 이것은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철 조각은 킬로그램당 0.5크로나이고, 항공기는 킬로그램당 10,000크로나이다. 지난 25년간 스위스의 수출품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제로 수출품의 90%가 이전 가격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에

스웨덴 수출품의 가격구조는 에릭슨Ericsson의 이동전화와 아스트라Astra의 약품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서유럽 나라들 중 스위스가 이자율이 가장 낮다. 스웨덴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1985년 이자율에 대한 통제를 폐지한 이래로 더욱 높아졌다.

60년대 중반 이후에, 스웨덴의 세금과 공공지출은 전세계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세금은 GDP의 55% 수준이고, 공공지출은 65%를 상회한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각각 33%와 37%를 차지한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스웨덴은 유럽연합의 외환거래 시스템에 참여하였다. 몇 번의 평가절하가 있었으며, 1976년 이후에 스웨덴 통화는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의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하였다. 스위스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스위스의 통화는 전세계 다른 나라들의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1963년에서 1995년까지 스위스의 인플레이션은 스웨덴의 4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스위스가 스웨덴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스웨덴은 동질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풍부한 자연자원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다(육로수송보다 해로를 통한 수송이 비용이 적게 든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대규모의 공공부문이 이점으로 작용하였다면, 스웨덴은 아주 잘 살았을 것이고, 스위스는 그 반대였을 것이다. (구스타프 바사Gustav Vasa가 권력을 잡았다고 추측되는) 1521년 이후로, 스웨덴은 아주 강력한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공공부문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스위스의 중앙정부는 힘이 아주 약했고, 공공부문의 크기는 작았다. 그리고 국민투표제도는 소수민족과 지방의 의견을 보호해 왔다.

스웨덴과 스위스 사이의 이러한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보면서 1960년대 말 이후에 스웨덴의 경제와 정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서술해 보려고 한다.

2. 우리는 늦게 출발했다

미국 언론인인 마르키스 차일드Marquis Child는 1936년에 출판된 그의 책 『중도노선The Middle Way』에서 스웨덴을 소련식 중앙관리체제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타협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스웨덴 산업화의 초기 상황이

나 또는 1970년 이후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산업주의 industrialism은 스웨덴에서 늦게 등장했다. 19세기 중반부터 주식회사, 기업활동의 광범위한 자유, 자유 신용대부 시장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산업화가 일어났으며, 스웨덴에서는 발명과 혁신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가 기업가들에게는 황금기였다. 1892년에서 1911년 사이에 개인 사업가들에 의해서 Sandvik, Nobel, Atlas Copco, SCA, Ericsson, Alfa Laval, Munksjo, Facit, Bahco, SKF, AGA, ASEA, Elec-trolux, STAB, SAAB 같은 기업들이 생겨났고, 이들 회사는 후에 거대한 국제적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마지막 전쟁이 끝난 후, 스웨덴에는 불과 4개의 기업만이 설립되었다. 이들 회사는 IKEA, Tera-Pak, Gambro, Hennes & Mauritz들이다. 기술혁신에 기초해서 설립된 3개의 회사 중 2개가 스웨덴을 떠났다.

혁신에 기초한 기업들은 고속으로 성장을 거듭했으며,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스웨덴 국내시장이 아주 협소하다는 사실에 기인했다. 특히 스웨덴의 평균 가계소득을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러했다.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만 했다. 1876년에 설립된 에릭슨Ericsson의 경우, 1900년에는 생산량 중 90%를 수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요인은 기업들로 하여금 첫번째로는 판매 네트워크를, 그 후에는 다른 나라에 생산 자회사를 설립하게 했다. 이윽고 스웨덴의 대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했는데, 문화비평가들이 그 개념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한 것은 그로부터 50년 후였다. 이러한 설명은 역설적이지만 논리적이다. 스웨덴 기업들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웨덴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했고, 기업들은 스스로를 국제적으로 성장시켜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금세기 전후로 스웨덴의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스웨덴은 정교한 신용대부시장을 갖추고 고급교육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스웨덴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다. 아주 적은 규모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회사 설립과 확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과세제도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세율이 8% 정도였다. 전쟁 발발 후 세금이 인상되었으나, 1920년대에는 단지 소득의 12~13% 정도였는데, 이것은 현재의 화폐가치로는 4백만에서 5백만 크로나 정도이다. 이는 성공적인 기업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 더욱 많은 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하려는 경제적 동기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이 기간이 산업화의 초기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무에서부터 창조되었으며, 비교적 느리게 퍼져나갔다. 따라서 아이디어 하나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1870년에서 1970년까지의 100년 동안, 스웨덴은 어느 산업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왔다. 이에 대해서 네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스웨덴에서는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었으며,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자본은 소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철도건설 등에 투자되었다.

둘째, 발명과 혁신의 물결은 전기라는 새로이 발견된 힘의 원천과 관련되어 있었다. 수력발전과 같은 자연자원의 이용은 또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었다. 예를 들면 ASEA의 고압직류 전송이라는 신기술을 들 수 있다.

셋째, 인구이동에 따라 주택 등 사회 하부구조에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기는 했지만,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서 생산성이 더 높은 2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종으로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었다.

넷째, 국내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피했다. 스웨덴의 산업문화는 조직적 사고체계와, 거대하고 유연한 조직을 다루는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산업문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는 것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스웨덴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네 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 가장 작은 나라이다.

더 나아가 스웨덴의 산업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유럽의 재건을 위한 자본재를 주로 조달했다. 영국에 뒤이어 1949년 8월에는 스웨덴의 수출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달러화에 대해 30%의 가치하락이 있었다. 모든 수출환export currency에 대해서 평균 15%씩 가치가 하락했다. 1950년대 초반부터 공산품에 대한 세계 무역량은 매년 8%씩 증가하였다.

3. 1970년 이후로 중도노선The Middle Way은 내리막길이었다

1950년대 스웨덴의 경제성장은 평균 3.4%를 기록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4.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2%로 하락하더니, 198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서유럽의 전후 개혁이 완성됨으로 인해 생산자 중심의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스웨덴의 지위가 하락했을 것이다. 1974년과 1980년에 스웨덴은 두 번의 석유파동으로 타격을 받았으나, 비교적 싼 가격의 수력발전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1970년까지 스웨덴은 대부분의 경우 전세계와 보조를 맞춰 나아가고 있었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된 1973년부터 스웨덴은 계속되는 원가위기cost crisis를 겪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의 6년간 5번의 평가절하가 있었고, 크로나의 가치가 45% 정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제품)원가는 전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급속도로 상승했다.

1989년에 스웨덴은 마침내 환율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다. 이자율이 국제간의 거래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정되자 이자쇼크가 바로 뒤따랐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스웨덴의 원가위기가 통화의 가치하락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룻밤새 이자율을 500%로 상승시키는 등의 필사적인 방어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중앙은행은 1992년에 크로나의 환율을 유지할 수 없었다. 변동환율제로 바뀐 직후 환율은 즉시 30% 가량 하락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서유럽 전체는 실질 이자율 쇼크의 영향을 받았다.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었지만 독일 통일에 뒤이은 독일 이자율의 상승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자율은 상승하였다. 심지어 서독 같은 부유한 나라에게도 통일 전 사회주의 독재국가였던 동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굉장히 힘겨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자율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스웨덴에서 더욱 많이 상승했으며, 그 결과로 실물 및 금융시장의 붕괴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속되었다. 파산은 다섯 배나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2%에서 무려 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당국은 실업수당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러한 일은 예산 적자를 GDP의 10%에 이르게 하였으며, 외채는 4년간 두 배가 되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위기

스웨덴의 인건비 wage cost는 1970년대 초반에 매우 급격하게 상승했다. 1973년에서 1976년 사이에 산업 노동자 임금은 59%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의회는 근로소득세 wage bill taxes를 109% 증가시켰다. 수상인 올로프 팸 Olof Palme은 의회가 근로소득세라는 새로운 조세수입의 원천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회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노무비 labour cost는 3년 동안 80% 이상 증가하였다. 판매가격의 인상만으로는 노무비 상승분을 메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출가격은 전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었고, 스웨덴 기업들은 가격선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소멸되었다.

1973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해체될 때 스웨덴은 당시 유럽연합국가들의 환율관리시스템인 스네이크 Snake 체제(공동 변동환율제)의 준회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이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해서 고정환율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노무비가 서독보다 스웨덴에서 더욱 급격히 상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정치가, 경영자 혹은 노동조합이 이러한 규제가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1976년에서 1981년 사이에, 스웨덴의 통화는 전체가치의 30%를 하락시킨 네 번의 평가절하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수출산업 전체가 계속해서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었다.

스웨덴은 재정수입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는 아주 후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조세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공장 문을 닫고 고용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지출은 조세수입에 관계없이 증가했다. 1976년에서 1981년 사이에 공공지출은 GDP 대비 50%에서 65%로 증가했다. 세계대전 관련국 중 공공지출이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한 나라는 스웨덴뿐이다.

1970년대 중반, 스웨덴 정부는 해외 차입을 시작했다. 이러한 일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은 19세기 말엽 철도건설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큰 돈을 차입했었다.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스웨덴 정부는 해외에서 6천억 크로나를 들여왔다. 19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들여왔다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증가했을 것이

고, 그만큼의 성장을 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차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투자비율인 투자율은 감소하였다. 1975년과 1996년 사이에 투자율은 21%에서 14%로 떨어졌다.

자본 수입과 투자율 하락의 이러한 조합은 스웨덴의 경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발전을 지속하게 하는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3년 동안 정부는 차입한 6천억 크로나를 경제에 주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늘어났고 투자는 감소했다. 일할 수 있는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자발적 실업, 다양한 고용훈련프로그램에의 참가, 명예퇴직, 혹은 안락한 쉼터를 찾아 노동시장을 떠났다. 따라서 실제 실업률은 20%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어떤 메커니즘이 복지국가의 생산기반을 이렇게 약하게 했을까?

4. 사회주의가 의미했던 것은?

정치적 특권

1932년에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정부를 갖게 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을 예외로 하면, 사회민주주의가 정치를 계속 지배했으며, 사회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남겼다. 이것이 스웨덴의 정치적 사고체계의 발전을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었다.

사회민주당The Social Democratic Party은 노동조합과 공생 관계에 있었다. 두 조직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 안팎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노동조합은 사회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기구로서 도움을 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당은 모든 면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하도록 법률을 이용했다.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집권당은 고용주에 대해 노동조합의 지위를 강화시켜 주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왔다. 스웨덴의 편협한 노동법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직접적 행동에 대한 노조의 거의 무제한적 권리는 인간 기본권의 일부로서 헌법에 새겨져 있다.

이러한 공생관계가 스웨덴의 주된 정치세력인LOSAP(LO는 스웨덴 노동조합 연합이며 SAP는 사회민주당임)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기업가가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곧바로 정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회민주주의는 입법권에 관해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었다. 그리고 다른 정

당들과는 달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가 모든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상향을 지니고 있었다. 포퍼Karl Popper와 하이에크Hayek의 선상에 있는 자유주의는 개방된 사회를 원한 반면, 사회주의는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는 완성된 사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했다. 포괄적인 개입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국내에 만들었다. 국민들이 좋건 싫건 간에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사회민주주의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된 지난 수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 왔다. 정당의 정책이 이것에서 벗어났던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1930년대에 스웨덴이 산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20년대의 혹독한 산업합리화정책 때문이었다. 이로써 불황이었던 1930년대를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설비를 가지고 맞이할 수 있었다. 게다가 통화 가치가 약간 하락하였으며, 1931년에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금본위제gold standard를 폐지했다.

서유럽이 자본재를 구매하고, 노동력이 농업에서 2차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얻어진 국내 생산성의 향상으로 5, 60년대 스웨덴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고용과 소득의 증가에 대한 신용을 체계적으로 요구했다. 재산의 증가는 집권당과 관련지어졌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지배와 정치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설명들 중 하나이다. 당은 스스로 문제를 공식화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선거때의 논쟁에서부터 학교의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회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두드러진 의견은 정치적 개입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이러한 생각을 일부 수용했으며, 공공부문의 팽창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 몇몇 반대 정당들은 사회, 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새로운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에 더욱 비싼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

사회민주주의가 급진적인 평등의 이상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반대파들은 모든 경제활동의 동기가 사라지면서 나타나게 될 경제적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그 생각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사고체계를 형성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특권을 만들어 냈다.

마르크스의 유산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당이 혁명 자체를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생산수단의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목표는,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오랜 기간 주된 사상으로 남아 있었다. 1920년 의회에서 당이 채택한 수정계획은 “생산수단의 개인자본가 소유를 폐지하고, 그것들을 사회의 통제와 소유하에 두며, 현재의 무계획적인 제품생산을 사회주의적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재산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전한다.

그러나 당은 곧 급진적인 사회화의 요구를 포기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했는데, 모두 다 실리적인 것들이다.

당내의 여러 토론자들은 사회화socialization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은 국가나 노동조합 또는 새로운 ‘생산위원회production councils’가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생산을 계획할 것인가에 관한 준비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내 토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닐스 칼비Nils Karleby는 소유권의 다양한 역할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전이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률제정으로 자본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사회화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했다. 실용주의자들이 우세해졌다. 당은 순전히 실리적인 이유에서 전체적인 사회화정책을 포기했다. 국가소유와 고소득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관계는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화 개념은 이념적으로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실리적인 이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단기적으로 당의 주요 목표는 노동자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산업화 초기에 소득의 분배는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사회에서 생산된 부의 대부분은 경영자의 손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부는 재투자되어 성장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만약 당시에 소득이 조금 더 평등하게 분배되었더라면 투자 대신 소비가 증가했을 것이고, 현재 세대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금세기 말 불평등한 소득 재분배에 대해서 비판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검토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슈퍼 케인즈 학파 학자들

30년대의 불황에도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은 스웨덴의 출현은 케인즈의 생각을 빠르게 실천으로 옮긴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위대한 성공으로 묘사되어 왔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1931년에 금본위제를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공식 할인률(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이자율)이 1933년에 8%에서 2.5%로 하락했다. 1933년 봄, 우연한 기회에 스웨덴 크로나는 아주 낮은 환율로 안정되었다. 이것은 결국 크로나의 엄청난 가치하락을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이 늘어났고, 수출 산업의 이윤과 고용이 증가되었다.

이것이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안정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세금과 공공지출의 측면에서 본 경제정책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비율은 1930년대 중반에 조금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를 국유화하거나 최소한 국가의 통제하에 두려는 당의 기본적인 야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 변동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케인즈식 처방을 스웨덴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잘 따른 이유이다.

1930년대에 모든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실업을 없애고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이러한 노력들 중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안나 슈왈츠Anna Schwarz는 그들의 저서인 『미국 통화정책의 역사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에서 1930년과 1933년 사이에 연방 지출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 불황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넓게 확산된 보호무역주의는 그 두 번째 원인이었다. 1930년에 의회는 25,000가지 품목의 상품들에 대한 무역 장벽을 승인하는 스무트-홀레이Smoot-Hawley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호무역주의는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량은 19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3분의 1로 떨어졌으며, 많은 나라가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불황은 노동시장 정책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 주로 정치적 결정에서 야기된 것이다.

스웨덴이 극단적인 케인즈 정책을 선택했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학파 경제학자들이 공적 동기부여(이것은 케인즈의 처방에 포함된 것이었음)를 강력하게 권장했던, 그러한 전통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의 주된 관심사로 남아 있는 경제통제라는 새로운 논쟁거리를 케인즈가 사회민주주의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 후 전쟁이 발발하였고, 강력한 중앙통제의 스웨덴 경제는 전시체제의 발판이 되었다.

전쟁 후, 주기적인 경기변동과 함께 케인즈식 통제정책에 대한 경제적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잊었던 것은 케인즈의 통화안정에 관한 처방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경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수요를 자극할 때 그 결과는 바깥 세계와 따로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케인즈의 처방에는 수입, 수출에 대한 통제가 혼합되었다.

외국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웨덴과 같이 작고, 개방된 경제사회에서 케인즈의 정책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종류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가 경기변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다면 무역제한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무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손실이 더 클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국영 광산회사인 LKAB는 철광석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한다. 철광석에 대한 국제수요가 감소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곧 무역적자를 의미할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가족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요를 높인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철광석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아마도 스웨덴 가정들은 일본제 TV를 더 많이 구입함으로써 무역적자를 더욱 크게 할 것이다.

뮌헨의 계획경제

기본적인 사회화와 사회민주주의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예는 1944년에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론은 1차대전 이후처럼 전쟁 후에는 불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사회민주당 내의 위원회는 전후 불황을 회피할 목적으로 경제계획을 세웠다.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보편을 국유화하고, 효율적이라면 경제의 다른 분야도 국유화하고, 국가가 투자를 계획하며, 물가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환율과 무역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규제가 일시적 불황을 제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경제 계획안은 예상된 전후불황이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후계획은 단지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이해될 수 있었다. 사실, 당은 일반적인 국유화 개념을 버렸지만, 국가의 통제를 통해

주요 부문을 사회화하고 경제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었다.

1948년 선거에서의 논쟁은 주로 경제계획을 둘러싼 문제들에 집중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선거에서 거의 패배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부터 전세계적인 수요가 스웨덴의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국가 통제를 요구하는 실용주의적 주장은 사라지게 되었다.

마이드너의 임금생활자기금

1975년에 LO의 수석 경제고문인 루돌프 마이드너Rudolf Meidner가 이끄는 LO 위원회는 산업의 사회화 조치가 노동조합운동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안은 다음과 같았다. 이윤을 창출하는 모든 기업은 이윤의 20%에 해당하는 몫을 노조기금으로 매년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그 안이 수용된다면 노동조합은 이윤을 창출해 내는 모든 스웨덴 기업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웨덴은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 노동조합과 경영자 그리고 소유주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금으로 흡수된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권력과 소유권의 극단적인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머지 않아 하나의 조직이 모든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기금의 제안이 1976년의 선거에서 주된 논쟁으로 부각되었고, 사회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권력을 잃게 되었다. 1982년에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당은 임금소득자기금wage-earner fund을 도입했으나, 이는 이전의 사회화 기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다.

그러나 마이드너의 제안은 노동조합과 집권당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동시에 심각하다. LO의 최고 경제고문은 국가의 후원을 받는 노동조합이 국내의 모든 기업을 몰수해야만 한다고 아주 진지하게 제안했다. 사적 소유권을 비난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기본적 규칙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만약 사회민주당이 55% 이상의 득표를 했다면 마이드너Meidner의 제안은 시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들은 노조가 통제하고 있는 기금에 의해 소유되었을 것이다. 그때 스웨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을까 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성과를 개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윤을 창출하고 소유주가 있는 많은 기업들은 라우징Rausing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스웨덴을 떠났을 것이다.

소득의 사회화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기업을 사회화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아마도 대기업이 점점 더 국제화되어 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스웨덴 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어떻게 국유화할 수 있었겠는가? 반면에, 소득은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스웨덴의 과세는 1970년 이래로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1971년의 세금개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은 줄었으나, 세제는 더욱 진보적이 되었다. 즉 조세의 폭scale of taxation은 더욱 넓어졌고, 한계세marginal tax도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임금인상분까지도 세금으로 사라졌다.

스웨덴의 산업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액의 28%를 세금으로 지불한다. OECD 국가들의 산업노동자 세금 평균은 16%이다. 총소득이 산업노동자의 2배에 달하는 샐러리맨들에 대한 세금은 스웨덴의 경우 39%이고, OECD 평균은 24%이다.

여기에 간접세가 더해진다. 1970년대 초반 이후로 국가는 이른바 ‘고용주 기여금’이라는 것을 주로 인상해왔다. 그런데 고용주 기여금은 실은 근로세wage tax, 즉 임금명세서에 붙는 세금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할 것이다. 게다가, 당국은 소비세, 특히 에너지 소비세를 인상해왔는데, 일반 부가가치세가 이러한 소비세의 핵심을 차지했다. 스웨덴에서는 특별세와 부가가치세가 가격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얼마를 지불하는지 모른다.

스웨덴의 납세자들이 높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여러 이유들 중 한가지는 그들이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임금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서 보는 것은 직접소득세이다. 그러나 직접소득세는 전체 세금의 40%만을 차지할 뿐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과 내각의 각료들은 시민의 대리인일 뿐이지 통치자는 아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전체 세금부담액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생략한다는 것은 대리인인 국회의원과 각료들이 그들의 주인(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기업에서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60%, 고소득층은 65% 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공식적으로는 총소득 중 ‘고용주 기여금’이 연금, 실업수당,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부담액과 주어지는 혜택 사이에는 관련이 별로 없다.

집산주의

스웨덴은 1970년경부터 사생활에 관한 문제들조차 점점 더 집단적 해결방식에 맡겨왔다. 직장이 없을 때, 아플 때 또는 노년에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의 '사회보험'은 주로 국가가 통제하는 집단적 체제로 조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세금/기여액과 보험급료insurance benefit 사이에는 관련이 별로 없었다.

국민연금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1913년에 시작될 때부터 완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였다. 1960년에 도입된 확장체제인 ATP 또한 전적으로 정부가 운영했고, 완벽한 분배라는 기조하에 구성되었다. 오늘의 연금에서 내일의 연금에 대한 재원을 조달했다. 마치 끝없는 연쇄 편지chain letter와도 같은 것이었다. 연금제도의 보장성 때문에 생기는 개인연금의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연금의 특정 부분은 국가기금으로 합병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제도는 예금집단주의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

현재 연금제도는 아주 조금 개혁되었다. 소득 중 11% 정도가 연금으로 납입되는데, 이것은 단계적 프리미엄 방법level premium method이라고 불리는 개인연금저축기구에 지불된다. 그러나 이는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다. 이에 덧붙여 개인연금은 국고에 투자되고, 국가 예산의 대변에 기입되었다. 집권당과 관련된 단체들은 개인연금에금individual pension saving이라는 착상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아동보호제도

스웨덴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960년대 초반부터 공공아동보호public child care제도를 개발해왔고, 이 제도의 목적은 자녀의 수와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가 맞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장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법에 따라 돌봐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비용은 매우 비싸다. 부모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실질 비용의 10~20%만을 차지할 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납세자들에게서 부족분을 보충한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집권했던 반反사회주의 정부는 많은 망설임 끝에 부모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고는 아이들이 어떤 보살

핍을 받게 될 것인가를 부모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아동보호에 있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비난했다. 1994년에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을 때,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지방자치제에 의한 아동보호의 근간이 되는 철학은 부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인 지원은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탁아시설에 많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중산층의 부모들에게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거나 유모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위임해서는 안 되고 정치가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묵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중이라고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대다수는 부모들에게 지원금과 아동보호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 이유는 시립 탁아시설에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후에 그 아이들이 좋은 시민이 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시립 탁아시설에는 다녀보지도 못한 정치가들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논리가 그럴 듯하게 들릴 리 없다.

국가사회보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병이나 실직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에 대비한 보험을 필요로 한다. 더 나아가 병이나 실직과는 달리 예측할 수 있는 불행인 노년에 대비해 연금에 저축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보험을 집단체제로 구성해 왔다. 국가에 헌납한 세금에서 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민간연금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했다. 급여benefit가 적은 민간연금에 돈을 불입한 사람들은 불입액의 두 배가 넘는 소득세를 물어야만 하는 것이다.

의료보장의 재원은 주로 지방세에 의해 조달되었다. 수입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의료보험은 전적으로 국가의 운영 하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보험의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의회는 수익률benefit rates을 하향 조정했고, 기여액의 상당부분이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순수한 조세에 불과하다.

실업보험은 노동조합운동과 맞물려 있다. 1930년대에는 적용범위가 넓은 실업보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실업보험을 노동조합이 관리하며, 조합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밀접한 관계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조합에 가입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런 식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단체로 사회민주당 당원이 되었다. 그들의 가입비가 당의 재정에 쏟아 부어졌다.

스웨덴에서의 실업보험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오늘날 조합을 탈퇴해도 실업보험을 계속 보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업보험 가입비는 매우 낮다. 실업보험 급부금benefit payment 중 95~98%가 국가 예산에서 조달된다. 즉 스웨덴에서 실업보험이라고 불리는 것은 98%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다.

평등이라는 신성한 의무

1960년대 말, LO는 평등 캠페인을 시작했고 임금격차는 해소되었다. 캠페인은 언론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산업국가들을 휩쓸고 있을 당시에 캠페인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평등은 정치와 특히 언론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평등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토론되었다. 정치와 토론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강화시켰다. 모든 신문 기사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러한 일들은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 대신 단순하게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무지에 가면을 씌우는 것이었다.

스웨덴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은 불공정한 소득의 격차나 '불공정' 자체에 대한 반대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이'도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발전했다. '진지한' 신문, 잡지들은 집단들간의 차이를 추적하고, '불평등'을 드러냄으로써 그것들을 비난하는 일에 치중했다. 선호의 차이에 따라 주택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평등기준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하기 위해 값싼 주택을 좋아하는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공간이 넓고 방이 많은 집을 더 좋아하는 것과 같은 선호의 차이가 무시되었던 것이다.

현재, 스웨덴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의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의 개념은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LO는 세금징수 전후의 임금균등화를 보장했다. 급여구조는 중앙급여조정central pay settlement과 '저임금 개선low pay improvements'의 결합으로 압축된다. 거의 모든 노동조합 기구가 동일한 임금정책을 추구한다. 임금향상을 위한 대부분의 협정은 저임금층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임금정책의 첫번째의 목적은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임금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하는 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기술수준이 높은 근로자와 낮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오랜 기간의 훈련, 높은 교육수준에 대한 부가적인 급여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반으로 줄어들었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이 여기에 더해졌다. 1971년부터 세제稅制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이 강해졌으며, 이에 따라 과세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인플레이션율도 동시에 상승하였다. 그리고 임금상승이 뒤따랐다. 문제는 과세범위가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세금도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질임금은 그대로지만 세금은 증가한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임금 균등화 정도가 OECD국가들 중 가장 심하다. 아주 적은 소득에 대해서도 스웨덴은 적어도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고 사회적인 혜택은 매우 풍부하다. 이것은 일하고 투자하려는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하지 않는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투자율investment ratio은 금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1960년대 중반 24%에서 현재는 14% 정도로 뚝 떨어졌다. 투자의 대부분은 오래된 자본재를 교체하는 것이었다. 자본의 축적과 생산에 동시에 기여하는 신규 투자는 1970년 국내총생산 GDP의 16%에서 1996년에는 2%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스웨덴의 가계저축은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를 밑돌았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스웨덴 가계저축률은 가용소득의 3~4%였다. 이렇게 낮은 저축률은 산업과 주택건설에 큰 문제를 던져 주었다. 왜냐하면 회사와 건축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가계저축이 적으면 적을수록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저축률이 낮으면 자신의 집을 구입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진다.

정부는 저축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낮은 저축률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았다. 연금과 사회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연금과 질병수당, 실업수당 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누구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높은 한계세marginal tax는 각 가정이 가진 저축 가능한 돈을 압수해버렸다. 원래 저축은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부분, 즉 소득의 한계부분marginal income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한계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계소득에 타격을 주었던 것이다(과거에 한계세는 한계소득의 70 ~80%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약 60% 정도이다).

가계는 저축을 필요로 한다. 전쟁이 끝난 이후로 조건이 좋은 대출을 통해 정부는 주택건설을 지원했다.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채가 자동적으로 장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워졌다. 따라서 가계는 저축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저축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은 사라졌다. 부채가 자동적으로 장부에서 삭제되는 효과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은행은 개인예금을 원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가계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저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도 감소하고 있다. 주택건설은 1997년 1/4분기에 20세기 들어서 가장 낮은 추세를 보였다.

연이어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개인예금을 줄이고, 대신 집단예금을 증가시키려고 해왔다. 1960년의 연금개혁은 실질적으로 예금을 집단화한 것이다. 1970년부터 증가한 세금은 개인예금의 흔적을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조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노년에 대비한 저축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산업국가들 중에서 스웨덴밖에 없을 것이다.

주식에 대한 징계적인 세금

스웨덴은 주식저축share saving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소득에 비해 항상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해왔다. 1991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가 각각 세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윤분배에 대한 세금은 85%에서 92%에 달했다. 비사회주의 정부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폐지했으나, 사회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1994년에 재등장하였다. 다른 종류의 자본자산capital asset보다 주식의 소유에 대해서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은 징계적인 세금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는 사유재산

소유를 결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두 명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가인 닐스 칼비Nils Karleby와 빌헬름 룬스타트Vilhelm Lundstedt는 모두 소유권에 대해 논쟁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능적 사회화functional socialization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변명했다. 그들은 소유권을 여러 기능, 즉 다양한 재산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가 이런 기능들을 사회화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주인은 재산과 그것의 산출물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 원주인의 소유권은 줄어들지 않을 수 없는데, 세금과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기능적 사회화는 주로 민간 주택임대 사업에 적용되었다.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이를 완벽하게 적용시킬 수 없었다.

기업이윤이 분배되면 그것의 90%를 세금으로 거두어 가기 때문에 주주가 이윤의 분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따라서 이윤은 기업내에 잠겨 있었다. 이에 따라 이윤이 회사내에 적립되었고, 이는 과거에 수익성이 좋았던 기업들에게 투자가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에 좋았던 수익성이 자동적으로 미래의 지속적인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경제라면 이윤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발생한 이윤은 미래에 최고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재투자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스웨덴의 세금제도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사업의 장래성과는 상관없이 이윤은 오래된 기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배당소득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세제는 스웨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약업이나 전자산업 같이 지식집약적인 산업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산업 중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부문의 비중은 작다. 이것은 오래된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윤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세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일반적인 소유권에 대한, 특히 주식의 소유에 대한 적개심이 이러한 세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주식소유를 반대하는 캠페인은 분배주의적 정책에 의해 고무되었고, 이윽고 지배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헌법상의 권력의 집중

1970년 이래로 스웨덴은 단원제 의회제도를 유지해 왔다. 모든 문제는 확실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51%가 49%를 지배하는 것이다. 소수의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매우 약하다. 소유권은 너무 막연하게 형식적으로만 보장되었으므로 의회

의 다수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의회에서 51%의 지지만 얻으면 정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스웨덴 의회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거의 완벽하게 결핍되어 있다. 51%의 다수는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다. 스웨덴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다. 이것은 정부에 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된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에는 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스트 단체들이 있다. 스웨덴의 모든 학생들은 스웨덴에는 그런 로비스트가 없다고 배워왔다. 스웨덴의 로비스트는 의회로 진출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낼 수 있었다. 농업상임위원회 의장으로 농민이 선출되고, 주택문제상임위원회의 의장으로 건설노조의 조합원이 선출되는 것은 오랜 기간의 관행이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운동은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주된 자금원이었다. 이전에는 모든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사회민주당에 입당하고, 그 회비가 당에 쏟아 부어졌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회원이다. 그래도 노동조합이 당 수입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그들은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다른 혜택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을 괴롭히고, 임금협상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기업의 노동결정권the chartering of labor을 반대하는 등의 행위들이 합법화되는 것이 이러한 혜택이다.

스웨덴 헌법에서 소유권 보호에 관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2장 14절은 소유권의 보호를 다음과 같이 성문화한다.

“긴급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요청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징발이나 그와 비슷한 조치를 통해서 재산을 사회나 다른 개인에게 헌납하도록 강요받거나 공동체내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묵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는 한에서 모든 시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징발이나 다른 조치에 의해서 재산을 양도한 개인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을 것이다. …… 보상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조항에는 두 가지의 심각한 약점이 있다.

헌법은 사유재산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긴급한 공공의 이익이 의미하는 바를 명시하지 않았다. 보상 규칙은 개인이 완전한 가치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트라보 프레파라트와르Travaux Préparatoires는 법이 재산의 시장가치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적 재산권’

이라는 표현은 헌법 문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헌법은 세금의 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았다. 의회의 다수파가 세금을 100%로 인상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심지어 오늘날에는, 많은 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총소득보다도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금제도가 소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 보호는 민간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이다. 신뢰할 수 있는 소유권 보호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감히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5. 영원한 실업

취업할 수 있는 인구의 20%를 넘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거나, 또는 최소한 노동판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은 직업을 가진 국민들이 떠맡는 무거운 짐이다. 왜일까? 스웨덴이 실업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최저 임금수준이 높다. 노동조합은 임금결정에 독점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노동조합은 낮은 임금은 올리고, 높은 임금은 억제해왔다. 결과적으로 최저 임금수준이 계속 높아졌다. (의회는 고용주 기여액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노무비를 증가시켜 왔다.) 노조와 의회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할 정도로 높은 노무비를 유지해왔다. 노동투입량의 순가치는 총고용비용에 훨씬 못 미친다. 덧붙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25%의 부가가치세는 텍스웨지 tax wedge,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양과 근로자가 받는 양의 차이를 증가시켜 왔다.

둘째, 저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이러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납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셋째, 기본 급여율basic rates of pay이 너무 높다. 직장을 구할 수 없거나, 낮은 임금을 받고는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구제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위이다.

6. 쇠약해진 성장의 동기

스웨덴 경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성장의 동기가 쇠약해졌고, 경제자체가 유연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국가가 차입한 막대한 양의 자금을 경제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20%선에 계속 머물고 있다.

1921~22년에 스웨덴은 쇼크를 경험했다. 전시 특수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이다. 생산, 고용, 임금이 15~20% 가량 감소했고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23년부터는 모든 것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923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5~10%를 기록했다. 파산한 기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당시 세금율이 10% 정도였다는 것이다. 최고 소득세율은 17%였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시작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재미있는 질문이 있다. 1922년에 세율이 55%였고 텍스웨지tax wedge가 70%였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생겨났을까?

경쟁과 기술의 국제화는 구조조정과 변화를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제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작고 개방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경제는 매우 훌륭한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세금제도와 복지제도의 일반보호법안이 변화를 막는 강력한 장벽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교육 환부

(%/year)

국 가	연 도	교육환불율
호 주	1976	21.2
프 랑 스	1975	20.2
독 일	1978	10.5
영 국	1978	23.0
일 본	1976	8.8
스 웨 덴	1974	6.9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Paris, 1995.

GDP 대비 순저축률, 순투자율

(%)

연도	순저축률	순투자율
1970	15.3	16.1
1975	13.6	14.1
1980	5.9	9.0
1985	5.2	6.5
1990	5.3	8.2
1995	4.9	2.9

자료: SCB, KI

투자율, GDP 대비 총투자

(단위: %)

연도	투자율
1950	18.5
1955	20.7
1960	22.5
1965	24.5
1970	22.3
1975	20.8
1980	20.0
1985	19.3
1990	21.5
1995	13.6

총 정부외채

(단위: %)

연도	총정부외채
1977	10.43
1980	43.33
1985	139.00
1990	116.00
1992	351.00

1921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계세(단일임금 소득자)

(단위: %)

SEK	1921	1931	1941	1951	1961	1971	1981	1996	1996
150,000	13.7	14.7	28.5	37.0	40.8	49.5	52.6	34.3	38.0
250,000	16.1	15.1	36.8	42.5	49.9	60.6	74.6	51.2	58.8
400,000	17.6	17.9	40.2	46.1	53.5	60.5	80.0	51.2	56.7

* 1996년 소득기준

스웨덴의 실패 이야기

1998년 3월 9일 1판 1쇄 발행

2020년 4월 16일 1판 2쇄 발행

저자_닐스에릭 샌드버그

역자_공병호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